

이라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5.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5

I. 일반개황

면적	435천km ²	G D P	2,069 억 달러
인구	33.40 백만 명	1 인 당 GDP	6,196 달러
정치체제	공화제	통화단위	Iraqi Dinar(ID)
대외정책	친미, 친서방 정책	환율(달러당)	1,166.17

- 이라크는 2011년 기준 세계 5위, 중동 지역(북아프리카 제외) 3위 규모의 원유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나, 사담 후세인 축출 이후 종파 간 갈등으로 촉발된 내전을 비롯한 사회 혼란이 계속되어 경제 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라크의 양대 종파인 시아파와 수니파, 북부 쿠르드 지역의 쿠르드자치정부(KRG)는 연방제, 석유법, 지방선거, 국가예산 배분, 이라크 원유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유전 지대인 Kirkuk 지방의 귀속 등 여러 정치현안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충돌을 거듭하고 있음.
- 걸프전과 뒤이은 내전, 테러 등에 의한 파괴에 따른 인프라 시설 부족, 종파 간 갈등에 따른 테러 공격 지속에 의한 치안 불안, 석유법 제정의 지연으로 대표되는 투자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불확실성, 석유자원 개발권 부여의 주체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KRG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이라크의 투자환경은 여전히 위험도가 높은 상황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e
경제성장률	6.6	4.5	5.5	8.2	8.5
재정수지/GDP	13.3	2.0	0.0	14.4	7.3
소비자물가상승률	12.7	6.9	2.9	5.6	6.0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 석유 부문이 GDP의 65%, 총수출의 99%, 재정수입의 90%를 차지하는 등 중동 지역의 여타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경제구조가 석유 부문에 극도로 편중되어 있어, 국제유가의 등락에 크게 영향을 받음.
- 2012년에는 원유생산량 증가와 국제적인 고유가 추세 등에 힘입어 8.5%의 경제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3년에도 8%대의 경제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제조업 등 비석유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내전 이후 종파 간 갈등으로 야기된 테러 공격의 계속으로 외국인투자 유치가 한계에 부딪혀, 가까운 시일 내에 산업다각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걸프전과 뒤이은 내전, 테러 발생 등으로 인한 인프라 시설 부족

- 걸프전으로 인프라 시설의 파괴를 겪은 데 이어 미국과 유엔의 경제제재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와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프라 시설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뒤이은 내전으로 잔여 인프라 시설마저 파괴되었음.
- 현재 이라크 정부는 2,7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계획을 세우고 항만, 병원, 수처리시설, 도로건설 등 사회 인프라 재건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반정부 무장세력과 알카에다 등의 테러 공격으로 인한 치안 불안이 인프라 재건에 필수적인 외국기업들의 투자 진출을 저해하고 있음.

□ 치안 불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대립 등으로 기업투자 환경 불안정

- 내전 종식 이후에도 시아파와 수니파간의 갈등에 따른 폭탄 테러 발생 계속, 투자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불확실성, 유전 개발권 부여의 주체를 둘러싼 중앙 정부와 쿠르드자치정부(KRG)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이라크의 투자환경은 열악한 수준임.
- 경제 재건에 가장 중요한 석유법 제정은 이미 2007년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 외국기업의 역할 등에 관한 중앙정부와 KRG간, 시아파와 수니파간 이견으로 통과가 계속 지연되었음.
 - 이에 2011년 9월 정부 주도로 수정된 석유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정파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2013년 5월 현재까지 계류 상태로 남아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재건의 순조로운 추진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나. 성장잠재력

□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

- 원유의 확인매장량은 2011년 기준 1,431억 배럴(전 세계 매장량의 8.7%)로 세계 5위, 중동 지역(북아프리카 제외) 3위 규모임.

- 이라크는 확인된 80개 유전 중 24개(총 매장량 866억 배럴)를 개발 중이며, 석유법이 통과되면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신규 유전 개발에 나설 계획임. 주요 유전은 남부의 Rumaila, Bai Hassan, Zubair, 북부의 Kirkuk 등이며, 신규 유전개발 대상은 남부의 Majnoon, West Qurna, Nahr Bin Omar 등임.
- 이라크산 원유는 탄소 함량이 높고 황 함량이 낮은 고품질이며, 생산광구의 원유 저류층이 지하 650m 이내에 위치함에 따라 유전의 채굴비용은 배럴당 0.6달러로 여타 중동 지역의 평균 비용 1.5달러에 비해 생산 단가가 절반 이하 수준임.
- 이라크의 석유 생산량은 걸프전 이전인 2000년에 일산 257만 배럴을 생산하였으나, 2003년에는 전쟁으로 인해 133만 배럴 수준으로 급감하였음. 종전 후 노후화된 유전 설비 개보수 및 신규 유전 개발을 통해 석유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일일 생산량 330만 배럴을 기록하였음.
- 이라크 정부는 다국적 석유메이저들의 투자진출 유치를 통한 원유 증산을 도모하여, 일일 평균 원유생산량을 2012년 330만 배럴에서 2018년까지 880만 배럴로 증산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 천연가스의 확인매장량은 2011년 기준 3.6조 입방미터(전 세계의 1.7%)로 세계 12위, 중동 지역(북아프리카 제외) 5위 규모임.
- 천연가스의 70%는 유전과 연결되어 있어 원유 생산 증대에 따라 천연가스 생산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천연가스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 수반가스 소각처리 등으로 생산이 거의 없는 실정임.

□ 농업 부문의 성장 잠재력

- 농업은 비석유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로 과거 자급자족이 가능했으나, 잦은 전쟁 등으로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왔음. 주요 농작물은 밀, 보리, 쌀, 면화, 대추야자 등임.
- 농업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국영기업이지만 경영 부실과 종자 개량 실패 등으로 생산량이 계속 감소해 왔으며 부실한 관개수로, 과잉 방목, 사막화 등으로 1990년 이후 농업부문 생산량은 연평균 2.6%씩 감소하였음.

- 현재 이라크의 식량 자급율은 43%에 불과하며, 이에 정부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쌀, 밀가루, 설탕, 식용유, 분유 등 5대 기초식품을 수입하여 무상 배급하고 있음. 이를 위한 연간 예산규모가 50억 달러 이상으로 재정지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그러나 강우량이 충분한 북부 평야지대,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 유역 지대는 농업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농업 성장의 가능성이 높음. 국토 면적 중 약 27%인 800만 헥타르가 경작가능 면적이나, 미 농무부 추산에 의하면 이 중 400만~500만 헥타르만이 농지로 활용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신경제 정책을 통한 자유개방 시장경제 체제 수립

- 2003년에 지난 30년간 사담 후세인 정권에 의한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이 폐지되고, 경제 관련 법규를 대폭 개편해 자유개방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음. 무역 부문에서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5% 일괄 적용하고, 수입규제도 대부분 폐지하였음.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전 정권에서 지원해 오던 석유, 전기 및 각종 생필품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도 축소하고 시장 가격에 근접하도록 가격인상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이라크의 신경제 정책은 USAID의 Economic Recovery and Reform 계획에 의거해 무역, 투자, 민영화 등에 관한 전반적인 조직체계, 법령을 정비했음. 석유, 천연가스, 금융부문을 제외한 전 산업 부문에 대해 외국인의 투자와 부동산 소유 등을 허용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혁신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경제 분야의 주요 개선사항은 법적 장치 면에서 기업법, 은행법, 증권법, 외국인 투자법, 기금 조성법, 공공조달법, 중앙은행 관리법 등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전환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프레임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
 - 재정 부문에서는 누진소득세 도입, 공무원 급여 및 연금 인상, 균형예산 편성, 국채 발행, 지자체간 예산 편중 해소 등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음.

- 2006년 10월 10일 이라크 국회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투자를 규제하는 신 투자법을 통과시켰고, 동년 12월 대통령의 승인과 공포를 거쳐 정식 제정하였음. 신 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내외국인간 차별 철폐, 외국인 100% 단독투자 허용 등으로 주변국에 비해 앞선 제도를 갖추고 있음.
- 2007년 11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를 설립하고 주정부별로 투자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결프전, 내전 등으로 파괴된 산업과 사회 인프라 재건 사업 본격화**

- 이라크는 제2기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원유 증산 분야에만 주력해 왔으나, 현재 본격적인 재건작업에 나서면서 결프전, 내전 등으로 파괴된 산업과 사회 인프라 재건 사업을 본격화하여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시작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는 항만, 병원, 수처리시설, 도로건설 등 인프라 재건분야에 총 2,75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임.
- 분야별 주요 프로젝트는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등 주택건설 분야에 500억~800억 달러, 철도, 메트로, 공항 등 교통 인프라 분야에 460억 달러, 원유·천연가스 정제공장, 원유 파이프라인 등 에너지 인프라 분야 8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아울러 가스 터빈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전력 분야에 900억 달러, 배수관개망 구축 등 상하수도·폐수처리 분야에 150억 달러, 출입통제 시스템, 광통신망 구축사업 등 보안·IT 분야에 175억 달러, 병원 건설 분야에 175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 **원유 증산 계획은 석유법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난항 예상**

- 원유 증산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의 필수조건인 이산화탄소법과 석유법의 국회 통과가 계속되는 지연, 쿠르드족 거주지의 석유개발 계약 주체의 자격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KRG간의 갈등 등의 여러 요인으로 유전개발 입찰이 수차례 연기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이라크 정부의 야심찬 원유 증산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는 KRG가 2007년 독자적인 석유법을 제정, 석유개발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여 2009년 말까지 34개 기업들과

33개 광구 개발계약을 체결하였음.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승인 없는 계약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기업들의 중앙정부 유전 입찰 참여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시행하여 갈등을 빚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e
경 상 수 지	28,280	-1,152	6,488	26,203	26,269
경 상 수 지 / G D P	21.6	-1.0	4.8	14.5	12.7
상 품 수 지	33,967	4,145	14,432	39,051	37,023
수 출	63,728	39,429	51,760	79,684	93,909
수 입	29,761	35,285	37,328	40,633	56,886
외 환 보 유 액	49,531	42,041	48,320	58,738	62,762
총 외 채 잔 액	82,635	72,995	52,582	50,793	50,264
총 외 채 잔 액 / GDP	63.2	61.3	38.8	28.1	24.3
D S R	1.4	2.0	1.7	2.6	..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중앙정부 내 정파간 대립, 수니파의 반발 등으로 정국 불안 지속 전망

- 이라크의 양대 종파인 시아파와 수니파는 정치 이념과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독자적 정파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부 쿠르드 지역에는 KRG가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갖고 독자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

- 이들 3대 정파는 연방제, 석유법, 지방선거, 국가예산 배분, 이라크 원유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유전 지대인 Kirkuk 지방의 귀속 등 정치현안에서 각자의 이해 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이라크 정부는 국가 통합, 국민 화합, 치안 확보 등 국가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파/종파간 첨예한 대립, 종파 내 정치세력간 대립, 민병대 및 테러 세력의 활동 등으로 정치적, 사회적 안정 확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2010년 3월 실시된 총선거에서 Nouri al-Maliki 총리가 이끄는 법치연합(State of Law)이 수니파와 세속적 시아파의 연합정당인 이라키야(Iraqiya)당보다 2석 부족한 89석을 차지함으로써 정부 구성이 지연됐으며, 총선거 실시로부터 9개월이나 지난 12월 주요 정파간 합의를 통해 가까스로 제2기 정부 구성을 완료 하였음.
- 현 정부는 대부분의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일종의 거국내각 성격으로 내각이 정파별 지분에 따라 구성되어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효과적인 국가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선거 결과 집권 법치연합이 불안한 우세, 종파간 대립 심화 반영

- 2011년 말 미군 철수 이후 처음이자 2010년 3월 총선 이후 전국 단위 첫 선거인 지방선거가 지난 4월 18개 주 가운데 12개 주에서 실시되어, 집권 법치연합이 시아파가 다수를 차지하거나 시아파와 수니파가 혼재된 7개 주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음. 그러나 과반 의석에는 크게 미달하여 내년 총선에서 재집권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시아파 이슬람주의 정당인 이라크이슬람최고평의회(ISCI)는 1개 주에서 승리, 1개 주에서 법치연합과 동수의 의석을 차지하였음. 아울러 3개 주에서는 각 지역 토착 세력 후보가 다수를 차지하였음.
- 반면, 온건 성향의 이라키야당은 3석 이상을 차지한 주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번 선거에서 부진하였는데, 종파간 내전의 재현 우려로 수니파 주민들이 온건 성향의 이라키야보다는 al-Maliki 총리에 대항할 강경 세력을 지지한 것으로 분석됨.

□ 석유자원 개발을 놓고 중앙정부와 KRG간 대립 지속

- KRG는 자신들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Kirkuk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유전지대에서의 독자적인 석유개발 사업 추진을 계속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외국기업이 KRG와 독자적으로 체결한 석유개발 계약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한 법적 문제는 이라크의 석유/천연가스 부문 외국인투자 유치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KRG는 중앙정부가 쿠르드 지역에서 조업 중인 국제석유기업(IOC)들에 대한 원유공급 대금 지급의 체납을 이유로 2012년 4월 중앙정부를 통한 석유수출을 중단하였다가 9월에는 수출 재개에 합의하였으나, 중앙정부의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12월에 다시 수출을 중단하였음.
- 이에 5월 초 중앙정부의 al-Maliki 총리와 KRG의 Barzani 총리가 임시협정을 체결하였음. 금번 협정은 석유법 제정과 2013년 예산 개정을 비롯한 7개 이슈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KRG의 원유 수출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국내의 반정부 세력, 알카에다 등의 테러 공격 지속으로 사회안정 저해

- 이라크의 치안 상황은 걸프전 종전 이후 수니파 저항세력의 준동, 시리아 등지에서 유입된 알카에다의 테러활동 등이 격화되면서 2006년 말까지 악화 일로를 치달았으나,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미군의 안정화 작전, 다국적군에 의한 지역 중심의 치안확보 작전 결과 2007년 하반기부터 테러 건수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줄었음.
- 그러나 2009년 6월 미군의 도시지역 철수 및 이에 따른 치안권 이양과 2010년 3월 7일 총선을 앞두고 다시 강화된 테러 공격은 2010년 8월 8만여 명의 미군 전투병력 철수, 2011년 12월 5만여명의 모든 미군 병력 철수 등을 거치며 부침을 겪었음.
- 2012년 1~3월에는 이라크 전역에서 알카에다의 주도에 의한 동시다발 테러가 수차례 발생하면서 테러에 의한 사망 및 부상자 수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여,

7~9월 연속 3개월간 테러 사망자수는 500-600명 수준을 기록하였음. 최근에도 바그다드 등지에서 산발적인 테러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

□ 수니파 출신 부통령 사형선고, 시위대 무력진압 등으로 테러 공격 지속

- 2012년 9월, 수니파 출신 Tariq al-Hashimi 부통령의 테러 사주 혐의에 대한 재판이 터키에 망명 중인 al-Hashimi 부통령이 출두하지 않은 가운데 열려 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되자, 수니파 관련 테러단체들이 대대적인 폭탄 테러를 감행하여 9월 한 달 동안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가 650명을 상회하는 참사를 초래한 이후 테러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
- 지난 4월 23일 Kirkuk 서부의 수니파 Hawija 마을에서 정부군이 시위대의 체포를 시도하다 충돌이 발생, 27명이 숨지고 약 70명이 부상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이라크 곳곳에서 군과 수니파 시위대의 충돌, 군경을 겨냥한 무장세력의 공격 등 폭력 사태가 발생하여 이틀 사이에 최소한 110명 이상이 사망하였음.
- 이라크 주재 UN 사무소는 지난 4월에만 각종 폭력사태로 이라크에서 712명이 사망하고 1,633명이 부상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5월 들어서도 현재까지 420명 이상이 테러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앙정부 내의 수니파 장관들 사임, 내전 위기설까지 제기

- 정부군의 수니파 시위대 무력진압에 반발해 수니파인 중앙정부의 교육장관과 과학기술장관이 사임하였음. 앞서 3월에 재무장관과 농업장관, 그리고 2012년 8월 통신장관이 al-Maliki 총리 정부가 수니파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사임함에 따라 2010년 말의 연합정부 구성 이후 현재까지 5명의 수니파 장관들이 항의의 표시로 사임하였음.
- 2012년 12월부터 수니파 주민들이 주도하는 반정부 시위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어지는 등 현재 종파 분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알카에다 등 외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사주까지 더해져 계속되는 테러 공격으로 치안 공백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외 일각에서 내전 재발 위기설까지 제기되는 등 사회 불안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3. 국제 관계

□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경주

- 이라크 정부는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 쿠웨이트 침공 이후 소원해진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요르단에 대해서는 이라크와 요르단을 연결하는 송유관을 전액 이라크 측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쿠웨이트에 대해서는 과거 침공에 대한 3억 달러의 피해보상금 지급에 동의하였음.
- 미군 철수 후 독자적인 외교 노선 추구가 가능해진 이라크는 중동의 전통적 맹주로 군림해 온 사우디아라비아에 맞서 동 지역에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항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 내전 중인 시리아, KRG와의 관계에 적극적인 터키와는 소원한 상황

-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측(시아파)을 지지하고 여타 중동 국가들은 시리아 반군 세력(수니파)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시아파가 주도하는 이라크 중앙정부는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는 동시에 중동 국가들과도 대립하지 않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al-Maliki 총리가 시리아 반군 세력에 대한 불신과 반군 세력이 승리할 경우 그 여파가 이라크로 번져 종파간 갈등을 부채질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여타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가 긴장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터키와의 관계는 터키 정부가 al-Maliki 총리의 정적인 수니파의 al-Hashimi 부통령의 망명을 받아들이고 KRG와 직접 석유개발 사업권 협상을 벌이면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음. 터키 정부가 향후 이라크 중앙정부의 반발을 무시하고 KRG와의 직접 협상을 계속할 경우 이러한 긴장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잔액 규모는 지속적 감소 추세 유지

- 2004년 파리클럽이 이라크 채권 420억 달러 중 80%에 해당하는 336억 달러를 3년에 걸쳐 탕감해 주기로 결정하였으며, 대 이라크 최대의 채권국가(284억 달러)인 쿠웨이트 정부와 일본 정부도 파리클럽과 마찬가지로 80% 탕감안을 확정하였음. 이후 외채잔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외채잔액: 826.4억 달러(2008) → 730.0억 달러(2009) → 525.8억 달러(2010) → 507.9억 달러(2011) → 502.6억 달러(2012)

- 2012년 말 기준 외채잔액은 502.6억 달러로 추정되어 GDP의 24.3%에 달하나, 2012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총외채잔액의 1.4배이고, 석유수출 수입(收入)의 증가로 외환보유고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단기간의 외채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OECD 회원국 대상 중장기외채 연체비율 증가

- 지속적인 외채원리금 상환으로 외채규모는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OECD 회원국 대상 중장기외채 연체율은 2011년 12월 말 기준 87.1%를 기록한 데 이어 2012년 9월 말 기준 89.6%로 상승하는 등 높은 연체율을 유지하고 있음. 한편, OECD 회원국 대상 단기외채는 연체발생이 없음.

- 2012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앞 연체 현황

- 단기 : 연체금액 없음
- 중장기 : 연체금액 75.2억 달러 (총 지원잔액의 89.6%)

초과함에 따라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대 이라크 수출금액: 7.8억 달러('09) → 12억 달러('10) → 15.4억 달러('11)→ 18.7억 달러 ('12)
- 2012년 대 이라크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13.3% 증가한 120.9억 달러로, 수출은 자동차, 전기기기, 기계류,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18.7억 달러(전년대비 21.6% 증가), 수입은 원유 102.2억 달러(전년대비 11.9%)를 기록하였음.
- 이라크 시장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물론 경제재건 및 각종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당분간 기계류, 철강제품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인프라 재건, 신도시 건설 사업 등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증대 예상

- 이라크는 내전 이후의 인프라 재건, 신도시 건설 등의 건설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진출도 증가하여 제2기 정부 출범 직후인 2011년 1월부터 2013년 4월 말까지 총 143.5억 달러를 수주, 사우디아라비아(같은 기간 중 340억 달러 수주)에 이어 우리나라 제2의 해외건설 수주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였음.
- 한화건설은 2012년 5월 이라크 바그다드 근교 비스마야에 10만 세대의 주택과 도로, 상하수로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계약을 이라크 정부와 체결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임. 7년여에 걸쳐 완성될 예정인 동 프로젝트의 사업비 규모는 77.5억 달러(약 9조원)으로, 단일 공사로는 국내 최대 수주규모로 알려짐.
-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 사회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기술력 및 사업수행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 향후 이라크 건설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4> 한 · 이라크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주요 품목
수 출	1,200,771	1,535,321	1,866,357	자동차, 회전기기,
수 입	4,427,719	9,137,821	10,227,106	원유, 기타 섬유제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 이라크 해외직접투자 (2012년 12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 8건, 1억 5,675만 달러

V. 종합 의견

- 이라크는 2011년 기준 세계 5위, 중동 지역(북아프리카 제외) 3위 규모의 원유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나, 사담 후세인 축출 이후 종파간 갈등으로 촉발된 내전을 비롯한 사회 혼란이 계속되어 경제 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와중에도 2012년에는 원유생산량 증가와 국제적인 고유가 추세 등에 힘입어 8.5%의 경제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3년에도 8%대의 경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이라크의 양대 종파인 시아파와 수니파, 북부 쿠르드 지역의 KRG는 연방제, 석유법, 지방선거, 국가예산 배분, 이라크 원유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유전 지대인 Kirkuk 지방의 귀속 등 여러 정치현안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충돌을 거듭하고 있음. 또한 현 정부는 대부분의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일종의 거국내각 성격으로 정치적, 사회적 안정 확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여기에 걸프전과 뒤이은 내전, 테러 등에 의한 파괴에 따른 인프라 시설 부족, 종파 간 갈등에 따른 테러 공격 지속에 의한 치안 불안, 석유법 제정의 지연으로 대표되는 투자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불확실성, 석유자원 개발권 부여의 주체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KRG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이라크의 투자환경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임.
- 아울러 2011년 말 미군 철수 이후 시아파인 al-Maliki 총리의 수니파에 대한 억압적 정책에 반발하여 종파간 분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외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까지 개입하여 계속되는 폭탄 테러 공격으로 매월 수백 명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 내전 재발 위기설까지 제기되는 등 사회 불안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선임조사역 오경일(☎02-3779-5720)

E-mail : oki1122@koreaexim.go.kr